



필리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시도

만성적 재정적자로 국가신용등급 하향

필리핀의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2,138억 페소의 적자(GDP의 5.4%)를 기록하여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3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¹⁾ 등을 통해 적자폭이 다소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적자는 필리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공공부문의 채무가 누적되어 2003년 공공채무 총액은 GDP의 135.6%에 달하였으며, 2004년에도 GDP의 5.3%에 해당되는 2,570억 페소의 공공채무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5년의 경우 재정적자 보전과 관련하여 226억 페소(40억 달러)의 해외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국제금리가 인상추세로 전환될 경우 이 나라의 외채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최근 5년 재정수지 추이

단위: 10억 페소, %

	2001	2002	2003	2004	2005 ^f
수 입	562.9	566.2	627.8	697.5	754.7
지 출	711.8	780.0	825.6	886.3	922.4
재 정 수 지	-148.9	-213.8	-197.8	-188.8	-167.7
재 정 수 지 / GDP	-4.1	-5.4	-4.6	-3.8	-3.3

자료: EIU viewswire(2005. 3. 1)에 의거 재작성.

1) 재정지출 증가율은 2002년 9.6%, 2003년 5.8%, 2004년 7.4%로 축소 조정하였고, 특히 공적투자지출도 1998년 GDP 대비 5.5%에서 2003년에는 4.2%로 축소되었음.

〈표 2〉

경제규모의 최근 5년 변화 추이

단위: 10억 페소, %

	2001	2002	2003	2004	2005 ^f
경상GDP 규모	3,631.5	3,959.6	4,299.9	4,843.4	5,240.8
실질경제성장률	1.8	4.3	4.7	6.1	5.1

자료: EIU viewswire(2005. 3. 1).

따라서 S&P 및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필리핀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노력이 부족한 것을 중요한 사유로 하여 지난 연초에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²⁾하기에 이르렀다. 필리핀의 재정상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경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다 국영전력공사(National Power Corporation: Napocor), 국영은행(Philippine National Bank) 등 공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누적 손실, 부실한 조세제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2004년에 필리핀은 경제성장률이 6.1%로 다른 해에 비해 경제규모가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즉, 2004년에는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세수기반의 확대 및 관세수입의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당초 목표치를 3.2% 상회하는 6,975억 페소를 기록하였다³⁾. 따라서 재정지출도 증가했으나, 재정수지는 적자폭이 약 90억 페소 감소하였을 정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세수증대 기대

필리핀 정부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정부정책 추진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2004년 10월에는 세제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재정안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재정안정화 계획에 의하면 조세제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을 때 매년 800억 페소의 추가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8개 관련법 정비작업을 완료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에 재정수입 확대가 대폭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8개 관련법 중에서 주류 및 담배의 물품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은 2004년 12월, 그리고 징세 효율법안은 2005년 1월에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또한, 2005년 2월 말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법안⁴⁾ 및 면세대상 축소 법안도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신부가세법안이 기업소득세를 32%에서 35%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는 인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의 체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율체

2) S&P: BB (2003. 4) → BB- (2005. 1), Moody's: Ba2 (2004. 11) → B1 (2005. 2).

3) 재정수입 증가율: 2002년 5.8%, 2003년 10.8%, 2004년 11.1%.

4) 최고 부가세율은 10%에서 12%로 인상, 전기 및 유류제품에 대한 부가세율은 범시행 1차년 4%, 2차년 6%, 3차년 8%, 4차년 12%로 인상, 기초 식품류는 국내산일 경우 6% 수입품일 경우 8%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율체계가 다단계로 구성되어 실제 시행에서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계에 대해서도 시행상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신부가세법안에 대한 상원의 심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의 시행 예정 시기인 2005년 6월 이전에 동 법안의 상원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연체세금 탕감법안 및 투자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도 2004년 12월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의 소득세법 개정안⁵⁾과 여덟 번째 통신독점망세법안⁶⁾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측이 하원에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들어 재정수입 증가세 보여

2005년 1월의 총재정수입이 643억 페소를 기록하여 1/4분기 목표치 1,630억 페소의 약 40%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특히 세

수가 총재정수입의 65.3%에 달하는 420억 페소로서 목표대비 15%를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난 1월의 관세수입이 목표대비 10.3%를 초과하는 106억 페소에 이르렀으며, 여타 재정수입도 목표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117억 페소를 기록하였다.

재정수입의 호조 배경으로는 담배 및 주류의 물품세율 인상, 조세징수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금융기관의 총수입세⁷⁾, 수입인지세,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 등의 세수가 예상보다 증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1월에도 808억 페소의 재정지출이 발생하여 재정수지는 165억 페소의 적자를 보였으나, 재정적자 규모는 예상보다는 약 2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동 식】

5) 세금부과 대상 소득의 산출과정을 순액제에서 총액제로 변경하는 법안.

6) 통신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신에 독점망세(franchise tax)를 부과하는 법안.

7) 2004년 3월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제도가 부가가치세제에서 총수입세제(gross receipts tax)로 변경되었음.